윤활유, 사업성 악화 "설상가상"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기금 징수 대상 … 95년 61억원 부담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윤활유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석유사업법이 94년말 바뀌면서 79년이후 석유사업기금 면제 대상이었던 윤활유가 95년부터 부과대상으로 전환됐고, 여기에 지나친 시장쟁탈전에 따른 가격파괴와 시장 무질서 양상까지 겹쳐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활유산업계는 지금까지 석유사업기금 운영 대상에서 제외돼 94년까지 기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95년부터 수입 윤활유 및 윤활기유는 물론 윤활기유 제조기업 등도 석유사업기금을 일괄 징수,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기준 국내 윤활유 공급이 85만㎘임을 감안할 때 기금 부담액은 미합중국통화 1.7달러에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1억5000만원(㎘당 1.7달러×환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수입 윤활기유는 20억원, 국내생산 윤활기유는 40억원 등 61억5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영세기업의 난무와 정유사들의 덤핑판매, 외국의 저가품 수입 급증 등으로 시장질서가 극히 혼탁해 있는 윤활유산업계는 석유사업기금까지 부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영세 윤활유 수입기업들은 법 개정조차 파악하지 못해 법의 실효성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윤활유 시장이 위축돼 도산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윤활유 전문 제조기업들은 원가절감 및 신용도 창출 등 경쟁력 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유회사들의 시장 뒤흔들기에 농락당하고 있다.
반면, 정유회사들은 윤활유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에 그치고 있는데다 실익 우선보다는 물량공급에 초점,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등 시장을 마구잡이로 뒤흔들어 윤활유 시장의 혼탁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같은 마구잡이 경쟁은 가격하락을 가속화, SH급이 95년말 대비 45% 하락한 4ℓ캔 기준 8000원 1만원, 드럼당 21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6/3>